광주·전남 다문화 결혼·출생 모두 줄었다

2015년 다문화인구동태 … 결혼 광주 7.1, 전남 8.2%P ↓

소득·어학 요건 등 이민비자 심사 기준 강화 원인

광주와 전남에서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이 혼인하는 다문화 결혼이 점차 줄고 있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2015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와 전남의 다문화 혼인은 각각 459건과 755건으로 전년보다 35건과 67건 감소했다. 지난해 전체 혼인이 광주가 8305건에서 8036건, 전남이 9442건에서 9359건으로 전년대비 각각 8.3%와 0.9% 포인트 감소한 데 비해 다문화 혼인은 7.1%와 8.2% 포인트 줄었다.

이에 따라 전체 혼인에서 다문화 혼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광주와 전남이 각각 5.7%와 8.1%로 전년보다 0.2%와 0.6%포인트 하락했다.

이처럼 다문화 혼인이 감소한 것은 '베트남 신부 학대 사건' 이후 2011년부터 정부가 이민비자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소득과 어학 요건도 까다롭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제결혼 사기가 증가하면서 다문화 혼인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조성된 여파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혼인이 줄면서 출생아 수도 함께 감소했다. 지난해 광주와 전남의 다문화 출생아는 각각 447명과 1001명으로 전년대비 18.1%포인트와 7.6%포인트 떨어졌다. 전체 출생아에서 다문화 출생아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광주가 4.3%에서 3.6%로, 전남이 7.3%에서 6.6%로 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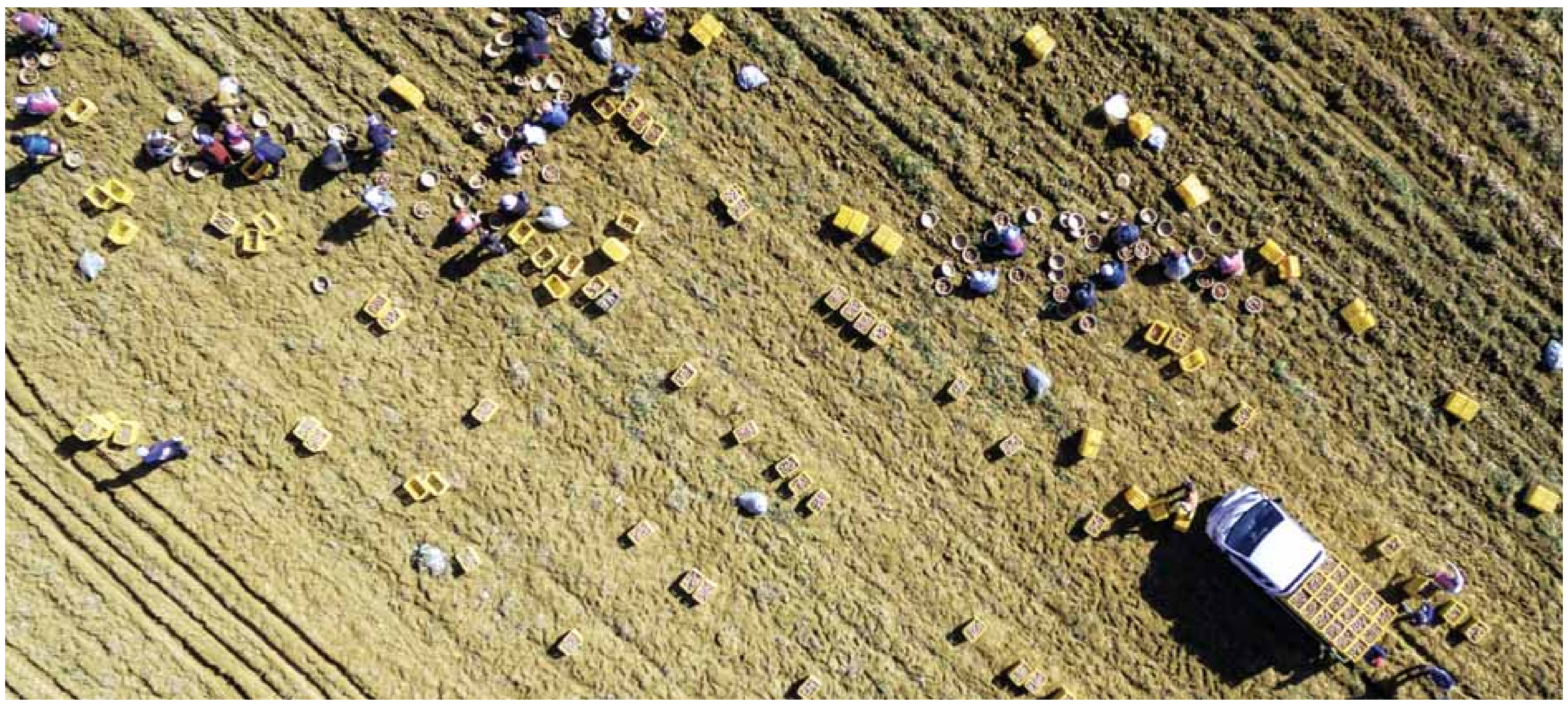
광주·전남의 다문화 부부의 이혼은 각각 248건과 469건으로 전년보다 29건(-10.5%)과 67(-12.5%)건 감소했다.

전체 이혼에서 다문화 이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광주와 전남이 각각 9.0%에서 8.6%, 12.9%에서 11.5%로 떨어졌다.

한편 지난해 전국의 다문화 혼인은 총 2만2462건으로 전년보다 1925건 감소했다. 지난해 전체 혼인이 전년대비 0.9% 감소한 데 비해 다문화 혼인은 7.9% 줄어 감소폭이 컸다.

지역별 다문화 혼인 건수는 경기(5720건), 서울(5007건), 경남(1240건), 부산(1160건), 인천(1155건), 경북(1002건), 충남(921건) 등 순으로 많았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고구마 수확 한창 16일 오후 전남 영암 신북면의 고구마밭에서 농민들이 수확한 고구마를 바구니에 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세계수영대회·亞문화전당 내년 국비 확보 순조

관련 예산 정부안보다 각각 55억·83억 증액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 아시아문화전당 사업 등 광주시 주요 현안사업의 내년도 국비 예산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되면서 현안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전망이다.

16일 국민의당 송기석 (광주 서구갑)의원과 광주시에 따르면 국회 교문위 예산심사 결과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련 예산이 정부안 19억원에서 55억원이 증액된 74억원이 반영됐다.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예산도 정부 예산안(484억원)에서 83억원 증액된 567억원이 반영됐다.

또한, 광주시가 추진하는 아시아문화전당 관련 지자체 보조사업도 교문위 예산소위 심사 과정에서 대거 반영돼 상임위를 통과했다.

신규 사업인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플랫폼 조성 사업비 10억원이 반영된 것을 비롯해 ▲한국학 호남진흥원 건립 사업비 2억원 ▲천년의 빛 '미디어창의파크' 4억원도 중앙투자심사 또는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등 선행 절차 완료를 조건으로 신규 반영됐다.

아울러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10억원) ▲광주 세계웹콘텐츠 페스티벌 개최 비용(5억원)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 지원(2억5000만원 증액) ▲광산농악 전수교육관 건립(10억원) ▲첨단융합콘텐츠 제작 및 유통지원 사업비(11억원 증액) 등이 반영됐다.

광주 축구 동호인의 숙원사업인 염주생활체육시설 내 월드컵 보조구장의 축구전용구장 건립비 26억원도 신규 반영돼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시민 건강 증진을 더욱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송 의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어수선한 상황에서도 교문위 예결소위 위원장으로서 지역의 현안 사업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 면서 "예결위원은 아니지만 예결위 심사 과정과 본회의에서 원안 반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장현 광주시장은 정부 내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결위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16일 오전 국회를 방문해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위원장 등을 면담하고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당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주광덕 새누리당 예결위 간사를 만나 국비확보를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전남도 축산업 경쟁력 강화 1조4000억 투입

2020년까지 … 2차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5개년 계획

전남도가 지역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는 2020년까지 1조4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전남도는 16일 "축산 전문가와 관련 단체 등 의견을 수렴해 가축 사육 환경 개선, 친환경축산물 인증 확대, 축산경영비 절감 및 가축 분뇨 육상 처리, 국가재난형 가축 방역체계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제2차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 따라 전남도는 안전축산물 생산과 악취 없는 쾌적한 축산 환경 조성, 청년이 돌아오는 희망찬 축산 프로젝트 추진, 축산업 수출 기반 조성과 구제역·AI 등 주요 가축질병 청정화를 목표로 56개 사업을 추진한다.

분야별로는 안전축산물 생산·공급 17개 사업 7865억원, 악취 없는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8개 사업 3515억원, 축산의 6차 산업화 및 수출 기반 조성 19개 사업 1692억원, 선제적 동물방역으로 가축질병 청정지역 유지 12개 사업 1055억원 등이다.

가축 사육 환경 개선을 위해 3100호의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원하고, 조사료 재배 면적 안정적 확보를 위해 전문단지를 2만ha로 확대 조성한다. 농협은 700여억원을 투자해 2019년까지 축산물 종합 유통센터를 나주시에 건립하고, 한우고기 수출 확대에 대비해 간척지에 1만 마리 규모의 한우 사육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AI 주 발생지역인 나주시와 영암군, 도내 철새도래지 등 69개소에 대해선 중점 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해 특별 관리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익산서도 H5N6형 AI 바이러스 검출

농식품부, 방역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는 익산시 춘포면 소재 만경강 수변에서 포획한 야생조류 시료에서 H5N6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16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AI 상시 예찰 계획에 따라 지난 10일 야생 철새의 한 종류인 흰뺨검둥오리를 포획해 시료를 채취했으며, 정밀 검사를 위해 종란에 접종한 결과 14일 종란 속 병아리가 폐사했으며, H5N6형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달 28일 충남 천안시 소재 봉강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같은 종류의 H5N6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데 이어 두 번째다.

특히 그동안 국내에서는 고병원성 AI 유형 중 H5N1, H5N8형 등이 검출된 사례가 있지만 H5N6형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H5N6형은 중국, 베트남, 라오스, 홍콩 등지에서 유행하고 있으며, 인체감염사례(세계보건기구 공식 보고 기준)는 2014년 4월 이후 현재까지 중국에서만 15명이 감염돼 6명이 사망했다. 다른 나라에서의 인체 감염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H5N1의 경우 2008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854명이 감염되고 450명이 사망했고 또 다른 유형인 H7N9 역시 감염자가 700여 명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 발견된 H5N6형은 인체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약 20일 간격으로 천안과 익산에서 잇따라 같은 종류의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데다 AI 자체가 전염성이 강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농가에 유입되지 않도록 방역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국회 교문위 '최순실 예산' 1748억 삭감

'최순실 게이트'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의 내년도 예산 가운데 1748억원이 국회에서 삭감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17년도 문체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교문위는 특히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관련 예산 삭감에 집중했다. 예산결산소위원장인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은 "최순실 차은택 예산 가운데 국가이미지 통합사업 예산, 위풍당당 코리아 사업 예산, 가상현실 콘텐츠 육성사업 예산, 재외 한국문화원 관련 예산 등 총 1748억 5500만원을 삭감했다"고 전했다.

대신 전체 문체부 소관 예산은 2168억원 증액됐다. 관광진흥기금 등 2천132억원이 감액됐고,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4천300억원이 증액됐다. 이날 의결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한편 예산안 의결 후에는 조윤선 문체부 장관이 "예산안 감액으로 정책사업 추진이 어려워졌다"며 유감을 표해 야당 의원들과 설전도 벌어졌다.

조 장관은 "단지 (최순실 게이트 의혹 사업과)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 등으로 1740억원이 넘는 예산이 삭감된 것은 정책 집행에 차질이 예상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